

투데이 칼럼

지언(知言)의 스피치 이해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언(知言)'은 상대의 감춰진 생각과 욕망을 속속들이 읽어내는 판단력이다. 일찍이 공자와 맹자는 사람공부, 세상공부의 요체로 '지언'을 꼽았다. 공자는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맹자는 자신의 강점을 '지언'을 꼽는다. 공자와 맹자는 인성이 흔들리지 않는 경정심을 찾는 연대를 마음으로 잡는데 일치한다. 공자는 마흔에 불혹(不惑,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 맹자는 마흔에 부동심(不動心,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해졌다는 이야기다. 지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상대가 어떤 사람이나 못지않게 내가 불혹과 부동심의 올바른 잣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공자라고 처음부터 사람 보는데 눈 밝고 귀 밝은 것은 아니었다. 구변(口辯) 좋은 제자 '재야'에게 혹했다가 뒤통 당하고선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말만 듣고도 믿



김 양 옥 한국스피치먼접촉설립 대표

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실제 행동까지 대조해 보고서야 그 사람을 믿게 되었다. 모두 '재야' 덕분에 바뀐 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 맹자는 지언의 4가지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치우친 말(訛言)을 들으면 어느 부분이 가려졌는지를, 과장된 말(淫辭)을 들으면 어느 부분에 빠져 들었는지를, 거짓말(邪辭)을 들으면 어느 부분이 공백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사(詞)가 표면적 단어라던 사(辭)는 내면적 의도와 복잡한 맥락까지 담아내는 말로서 구별된다. 맹자의 지언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첫째, 논점이 편파적이지 않은가?

둘째, 사실을 과장 왜곡하지 않은가? 셋째, 정도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넷째, 곤경에 처할 때마따 오라기처럼 말을 바꾸지 않는가이다. 맹자는 '이 같은 판단근거는 성인이 다시 나와도 동의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한다. 흔히 '언어는 생각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감추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이때 상대의 감춰진 생각과 욕망을 속속들이 읽어내는 판단력이 바로 '지언'이다. 지언은 사람의 욕구를 찾아내어 맹자의 지언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첫째, 논점이 편파적이지 않은가?

는 것이다.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 나는 대화로 둘째, 자주 언급한 말에서 핵심을 찾고 셋째, 질문을 하면 알 수 있고 넷째, 상대의 이미지 분석하고 다섯째, 상대의 말에 잘 경청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는 마음을 표현도 하지만 마음을 감추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거짓말, 허언을 깨닫지 못하면 상대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없다. 세상 살아가면서 큰 아픔이 뒷통수를 맞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달콤한 말에 당해서는 안 되고 순간순간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스피치 종류의 일부인 지언을 잘 사용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기 말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표현의 종합적인 스피치기법 터득하여 살아가는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다.

기고문

지방선거, 정당 공천 없애야...

1991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지방자치체는 해를 거듭하며 발전해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체는, 대의 민주주의의를 좀 더 충실히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대다수 국민들이 의견을 함께 한다. 지방에도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주도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중앙이 가진 권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민주정신이 깃들어 있기에, 지방자치제도에 의구심을 품기보다 이 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른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주민의 자치 의식 수준을 한층 높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선도자가 바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심을 읽고 반영하는 단체장과 의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 우리나라는 2000년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공천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폐지 논란이 일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정당공천제에 민주적인 방식을 가미한, 상향식 정당공천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구 당원들의 대부분을 당원협의회와 운영위원장이 모 집 관리하며 진성당원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으면서 조직 동원력과 재력이 있는 지역 투후들의 선출만을 보장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시다시피, 후보의 정당공천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면 정당은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해 지방정치의 중앙 예측화가 강화되



최 인 규 고령군의회 의장

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며, 그리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 더 나아가 중앙당에 지매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유권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당공천권을 파내기 위해 자신의 소속 정당과 관리당원의 눈치를 보며 공천권자에게 출서기를 하고, 공천권자는 공천을 미끼로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며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게다가, 유권자들 또한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다양한 인재 등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수정당의 후보를 그리고 지역에서 시민운동으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무소속 후보들의 진입 또한 쉽지 않음을 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공천권을 손에 쥔 정당에서는 충성심이 강한 후보를 당선시켜 비정당적인 방법으로 지방행정에 관여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지역 의 주요 현안문제 개입하며 기초 단체장과 의원들을 중앙정치 수족으로 부리면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정당 공천제라는 덫에 걸려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당내에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데 과연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한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리하여, 능력 있고 준비된 인물들이 정당 공천이 아닌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연속으로부터 벗어나고,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막아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후보의 정당 공천제가 반드시 폐지되어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기대해본다.

사 설

중대재해법 만들면 무엇하나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지금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사업장에서만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설 연휴가 이어졌고 기업들은 대거 휴업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사흘 만에 경기도 양주시 삼포산업 체석장에서 토석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열흘 뒤에는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여전히 기업은 안전 문제를 비용으로 보고 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큰 것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도 바뀌지 않았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범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부서를 만들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일에만 급급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않고 현장 소장이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땀질식 숭방광이 처벌만 이뤄지면 중대재해는 반복돼 왔다. 안전 조치와 고공 구조를 바꿀 권한이 있는 경영 책임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가 없어지지 않는다.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 죽음을 막지 못한다.

태종호의 통일기행

시인이자 통일운동가인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대표가 최근 '태종호(太宗鎬)의 통일기행(統一紀行)'을 출간해 관심을 모았다. 저자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찾고 있다. 이 책은 30여년의 역정을 진솔하게 기록한 기행문(紀行文)이다. 태종호 대표는 "이 책을 통해 국민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언제나 강대국에 의해 환란에 휩싸였다. 주변 세력이 바뀔 때마다 선택의 강요에 시달려 온 것이다. 우리에게 자강(自強) 외에 답답이 없다. 자강의 첫걸음이 바로 한반도 통일(統一)이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통일비용보다 통일을 해서 얻는 편익이 많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왔다. 한편에선 통일을 이룰 경우 엄청난 혼돈이 올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통일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 두 정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후 점차 좁혀 나가면서 나중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정부를 한시적으로 따로 유지해 가면서 교류해야 한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세습정치다. 김정은 시대로 와서 그것이 마감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은 가능하다. 거기엔 김정은의 건강 문제도 있다.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통일의 최고 걸림돌은 남북갈등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통일도 아니고, 핵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좀 더 강하게 야 국가를 제대로 유지하고 통일도 하고 중전산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다. 눈치보 기식으로 간다거나, 너무 저를 잘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